



10월 18일(목) 11:00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) 이후 사용

비고

브리핑 : 10.17(수) 11:00, 정부세종청사, 규제총괄정책관
※ 본 자료는 기사작성 편의를 위한 초안이며, 회의결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추가배포 될 수 있습니다

담당

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

과장 류승목, 사무관 이규배
(044-200-2430, 2407)

시장 진입장벽은 낮추고, 영업활동 제약은 줄이겠습니다.

- 시장성장 ·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혁신 -

- ▶ **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** (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하여 신규 진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받아들여지는 '과당경쟁 우려' 기준 삭제)
- ▶ **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** (단,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은 강화)
- ▶ **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 자체 멸균시설 설치 · 처리 허용**
- ▶ **LPG 판매사업자(소매업자)의 공급범위를**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**확대**(3톤→10톤)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8일(목) 오전,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, 「시장진입 · 영업 규제 혁신 방안」을 논의 · 확정했습니다.
- 이번 대책은 규제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다더라도 시장성장 ·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,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· 개선한 결과입니다.
- 올해 초부터 공정위를 비롯하여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, 국조실 조정 등을 거쳐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40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,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시장진입 장벽 완화

□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,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 장벽을 완화합니다.

①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

○ 항공, 도·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의 인·허가, 신고·등록 등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완화합니다.

◆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(국토부)

• **기존** 항공사업법 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* 중 하나로 "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"이라는 요건 규정 → 면허기준이 모호하여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

* △(정성적 기준) 안전성, 과당경쟁, 이용자 편의, 재무능력 등 / △(정량적 기준) 자본금, 항공기 대수 등

• **개선** 면허기준에서 '과당경쟁' 관련 기준 삭제

☞ (효과) △ 건실한 항공사업자 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, △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, △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

◆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 (공정위)

• **기존**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필요

• **개선** 통신판매업 신고제를 폐지 (단,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등은 강화)

☞ (효과) 통신판매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

* '18.8월 현재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총 9조 57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.6% 증가(통계청)

○ 또한, 경력 등 자격요건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과도하게 설정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,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.

◆ 문화재 수리업자의 자격요건 완화 (문화재청)

• **기존** 문화재 수리업자가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한 전기·통신·소방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 필수

• **개선** 문화재 수리업자가 해당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가능

☞ (효과) 문화재 수리업자들의 경영 부담 경감 및 관련 산업 활성화

* '18년도 현재 국고보조사업 중 문화재 수리 관련 전기·통신·소방공사 규모는 각각 44건 28억원, 79건 47억원, 68건 40억원

◆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(소방청)

- **기존**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자격요건에서 **총괄재난관리자* 경력은 불인정**

*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

- **개선**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**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을 인정**

☞ (효과) 총괄재난관리자의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소방안전관리 전문성 제고

② 공공업무 민간참여 확대

-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·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합니다.

◆ 약취 기술진단업 민간 개방 (환경부)

- **기존** 공공환경시설의 약취 기술진단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 수행

*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약취배출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 의무화

- **개선** 민간업체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기술진단 업무 수행 가능토록 등록제 시행

*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요건(시설·장비·기술인력 등), 결격사유 발생 시 등록취소 등 규정

☞ (효과)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

* 대상 시설 약 1,000개소

③ 신규 업종·유형·방식 허용

- 시장환경 변화,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기존에 없었던 업종·유형·방식 등을 추가로 신설·허용합니다.

◆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 (문체부)

- **기존** 시뮬레이터류 VR 게임물에 대해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(전체 이용가,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)을 적용,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

- **개선** VR 게임 특성을 반영한 **VR게임 콘텐츠 등급분류 기준 신설**

☞ (효과) 연령대별 다양한 VR 콘텐츠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, VR 이용자 확대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

◆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 (농식품부)

- **기존**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*가 회사의 한 종류로 추가되었으나, 현행 농어업 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

*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의 설치의무가 없어 회사의 설립·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부담이 적은 회사형태

- **개선** 설립가능한 회사 형태에 **유한책임회사 추가**

☞ (효과) 농업인들의 회사 선택권 확대 및 설립부담 경감

2. 영업활동 제약 개선

- 영업가능한 지역·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제반 규제를 개선합니다.

① 영업범위 확대

- 기업의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·판매가 가능한 지역·대상을 확대합니다.

◆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 (교육부)

- **기존** 교육환경보호구역(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)에서는 **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**를 일률적으로 금지 →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
- **개선**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**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·처리 허용**

☞ (효과)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자체 멸균 처리 후 외부 소각장으로의 운반이 이루어짐에 따라 반출 처리하면서 발생 가능한 오염 우려 감소

* 213개 종합병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, 그 중 의료폐기물 배출량 1,000톤 이상의 8개 대형병원 확인 결과, 4개 병원은 설치·4개 병원은 검토 의향(대한병원협회)

◆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 확대 (산업부)

- **기존** LPG 유통체계상 소매 공급하는 **LPG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**를 안전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**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**까지로 제한

* 당초 LPG 판매사업자는 용기판매만 가능했으나, LPG 수요가 많아지면서 소형저장탱크(3톤 이하)가 용기를 대체함에 따라 소형저장탱크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('02)

- **개선** **LPG 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**으로 **공급범위**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**10톤 이하 저장탱크**까지 확대

* 향후, 판매사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등을 통해 안전관리 또한 강화

☞ (효과) 판매시장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

② 투자 제약요인 개선

-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합니다.

◆ **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** (행안부)

- **기존** 지자체에서 입찰 시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참여자격 제한 가능* → 우수한 실적,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

* 시공능력, 실적, 기술보유상황, 재무상태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여자격 제한 가능

- **개선**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 → 경기하강시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

☞ (효과)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들의 판로 확대 및 경영 활력 제고

③ 환경변화 반영

-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규 유망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거나,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.

◆ **개인형이동수단(Personal Mobility) 도시공원 통행 허용** (국토부)

- **기존** 현행법상 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 통행 제한
- **개선**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, 안전기준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

☞ (효과) 개인형이동수단 수요 증가에 따른 산업 활성화 및 이용공간 확대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

* 개인형이동수단 국내 판매량은 ('14) 3,500대 → ('15) 17,000대 → ('16) 65,000대로 지속적으로 증가(도로교통공단, 한국교통연구원 등)

- 정부는 '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* 정부는 시장진입·영업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·개선해 왔으며,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개정시기가 도래한 일부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미 발표

-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,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※ (붙임) 시장진입·영업 규제 혁신과제 40건 목록

1 시장진입 장벽 완화 (20건)

1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 [9건]

연번	과제명 / 개선내용	개정법령 / 개정시기	소관부처
1	<p>◆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</p> <p>기존 항공사업법 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로 "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"이라는 요건을 규정, 사업자가 시장 진출하는데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</p> <p>개선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 관련 기준 삭제</p>	항공사업법 ('18.5 발의)	국토부
2	<p>◆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</p> <p>기존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필요</p> <p>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(단,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 등은 강화)</p>	전자상거래법('18.12)	공정위
3	<p>◆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요건 완화</p> <p>기존 문화재 수리업자가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한 전기·통신·소방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 필수</p> <p>개선 전기·통신·소방 공사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해당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가능토록 개선</p>	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('18.12)	문화재청
4	<p>◆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</p> <p>기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필수적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 응시 가능 경력요건에 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 재난관리자 경력은 불인정</p> <p>개선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 인정</p>	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9.상반기)	소방청
5	<p>◆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설치 승인제 완화</p> <p>기존 경영·금융·물류전문대학원 설치에 사전심사승인 대상임에 반해, 일반 및 특수대학원 신설은 자율사항</p> <p>개선 타 전문대학원과 동일하게 경영·금융·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또한 사전심사 및 승인 → 사전협의로 완화</p>	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('19.4)	교육부
6	<p>◆ 사내대학 설립가능 주체 확대</p> <p>기존 종업원 200명 이상의 단독사업장에 사내대학 설립자격 부여</p> <p>개선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·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</p>	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('19.6)	교육부

연번	과제명 / 개선내용	개정법령 / 개정시기	소관부처
7	<p>◆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요건 완화</p> <p>기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만 영업용 보세창고 신규특허 허용 (예 : 최근 1년 대비 물동량 5% 이상 증가)</p> <p>개선 세관장이 정하는 물동량 범위를 충족할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가능 (예 :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규특허 가능)</p> <p>* 종합인증우수업체, 집단화 물류시설 입주 컨테이너 내륙 물류기지 등은 물동량 조건과 무관하게 신규 특허 가능</p>	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('18.10)	관세청
8	<p>◆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</p> <p>기존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안전 관련 분야(산업안전, 소방 등) 기사 및 산업기사만 가능하고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하여 참여 제한</p> <p>개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기능장 포함</p>	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('19.상반기)	소방청
9	<p>◆ 기술대학 입학자격 완화</p> <p>기존 재직기간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기술대학 입학자격 부여</p> <p>개선 입학에 필요한 근무경력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</p>	고등교육법 시행령('18.12)	교육부

2 공공업무 민간참여 확대 [6건]

연번	과제명 / 개선내용	개정법령 / 개정시기	소관부처
1	<p>◆ 약취 기술진단업 민간 개방</p> <p>기존 공공환경시설 약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 수행</p> <p>개선 약취 기술진단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도 개방</p> <p>* 시설장비 등 등록요건, 결격사유 및 제재수단 등 규정</p>	약취방지법 시행령('19. 6)	환경부
2	<p>◆ 민간기관 대상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신규 지정 확대</p> <p>기존 지식재산(IP) 담보대출 시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</p> <p>개선 평가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신규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</p>	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고시('18.9), 기술평가기관 지정공고 ('18.10) * 부처 기발표	특허청
3	<p>◆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용역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</p> <p>기존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하여(4개 기관)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</p> <p>개선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</p>	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('19.6) * 부처 기발표	특허청
4	<p>◆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요건 완화</p> <p>기존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(국유지) 매각 시, 공공단체에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민간기업은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 곤란</p> <p>개선 어항부지 우선매각 대상범위를 공공단체에서 해당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</p>	어촌·어항법 ('18.12) * 부처 기발표	해수부

연번	과제명 / 개선내용	개정법령 / 개정시기	소관부처
5	<p>◆ 고형연료제품 민간시험기관 추가 지정</p> <p>기존 고형연료 품질검사기관이 2개소 (기계연구원, 산업기술시험원)에 불과, 검사지연 우려</p> <p>개선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기관을 추가로 지정*(민간포함)</p> <p>* (재)FITI 시험연구원, (주)대덕분석기술연구소, (재)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</p>	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고시 제정 (18.4)	환경부
6	<p>◆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</p> <p>기존 민간사업자는 공여구역 내 기존 지상물 등에 대해 재사용 불가</p> <p>개선 공여지 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</p>	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(19.6)	행안부

③ 신규 업종·유형·방식 허용 [5건]

연번	과제명 / 개선내용	개정법령 / 개정시기	소관부처
1	<p>◆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</p> <p>기존 시뮬레이터류 VR 게임물에 대해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(전체 이용가,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)을 적용,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</p> <p>개선 몰입도, 체감도 등에서 기존 게임 콘텐츠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, VR 게임 특성을 반영한 VR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기준 신설</p>	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(19.9)	문체부
2	<p>◆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</p> <p>기존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회사의 한 형태로 추가되었으나,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</p> <p>개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로 '유한책임회사' 추가</p>	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18.12)	농식품부
3	<p>◆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청년농 참여 확대</p> <p>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생산자는 중소농업인, 귀농인으로 한정</p> <p>개선 청년농 참여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농의 직거래 참여기회 확대</p>	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고시 (18.10) * 부처 기발표	농식품부
4	<p>◆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에 대한 신기술 수의계약 허용</p> <p>기존 건설신기술, 환경신기술의 경우 공사와 물품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방재신기술은 공사만 수의계약 가능</p> <p>개선 지자체의 방재신기술 활용제품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</p>	지방계약법 시행령 (18.7) * 하위법령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) 개정 추진중(~10월)	행안부
5	<p>◆ 어촌계원 구성방식 확대 추진</p> <p>기존 어촌계원 구성방식을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국한 → 일반 어업인은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어촌계를 이종으로 가입해야 됨에 따라 가입비 부담 가중</p> <p>개선 어촌계원 구성방식을 일반 어업인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귀어·귀촌인 등의 어촌계원 가입 폭 확대</p>	수산업협동조합법 (18.7, 국회제출) * 부처 기발표	해수부

2 영업활동 제약 개선 (20건)

1 영업범위 확대 [5건]

연번	과제명 / 개선내용	개정법령 / 개정시기	소관부처
1	<p>◆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</p> <p>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(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)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 →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</p> <p>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·처리 허용</p>	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('18.12, 국회제출)	교육부
2	<p>◆ LPG판매업 공급(판매대상) 범위 확대</p> <p>기존 LPG 유통체계상 소매·공급하는 LPG판매사업자의 공급 범위를 안전관리능력을 고려하여 3톤미만 소형저장 탱크까지로 제한</p> <p>개선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으로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까지 확대</p>	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('19.하)	산업부
3	<p>◆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확대</p> <p>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의 범위가 풍수해 분야(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)에 한정</p> <p>개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가능 범위를 소하천정비법 등 4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중기계획, 위험도 평가 등으로 확대</p>	소하천정비법 등 4개 법률 ('18.12)	행안부
4	<p>◆ 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한 사업범위 확대</p> <p>기존 ① 보세공장 특허대상은 제조·가공·수리·조립·검사 등의 작업인 경우로 한정 ② 기존 공장 외에 신규 증설 시 공정상 일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일 공장으로 특허 가능</p> <p>개선 ① 보세공장의 작업범위에 분해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허대상 확대 ② 동일 기업체가 기존 보세공장과 근접거리(15km)이내에 신규 공장 증설시 단일 공장으로 신규 특허 허가</p>	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('18.12)	관세청
5	<p>◆ 대학의 교지·교사 소유 규제 완화</p> <p>기존 교육용재산(교지, 교사)은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</p> <p>* 연구기관이 국가소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,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 인정</p> <p>개선 교지·교사 소유 원칙 예외로 학생 주거용도 추가 허용</p>	대학설립·운영규정('19.1)	교육부

2 투자 제약요인 개선 [4건]

연번	과제명 / 개선내용	개정법령 / 개정시기	소관부처
1	<p>◆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</p> <p>기존 지자체에서 입찰 시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참여 자격 제한 가능 → 우수한 실적,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</p> <p>개선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경기하강시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</p>	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('19.12) *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('18.7)	행안부

연번	과제명 / 개선내용	개정법령 / 개정시기	소관부처
2	<p>◆ 공기업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</p> <p>기존 공공기관의 재무운영 성과 평가 시 부채비율 관리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같이 단기간에 차입이 큰 사업에 대한 투자 저조</p> <p>개선 기관의 고유사업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공기업의 경우, 주요사업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</p>	<p>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('17.12)</p> <p>* '18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'19년도에 평가 실시</p> <p>* 부처 기발표</p>	기재부
3	<p>◆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총액한도 상향조정</p> <p>기존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법상 한도(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%)에 근접하여 투자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지원 곤란</p> <p>개선 총액한도를 현행 10%에서 20%로 확대, 안정적인 신규투자 지원 가능</p>	<p>기술보증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('18.9)</p> <p>* 부처 기발표</p>	중기부
4	<p>◆ 고용친화적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</p> <p>기존 고용위기지역 등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로 신속한 재정투자 추진 애로</p> <p>개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간이 타당성 조사로 대체(4개월 기간 단축)</p>	<p>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('18.12)</p>	행안부

③ 환경변화 반영 [11건]

연번	과제명 / 개선내용	개정법령 / 개정시기	소관부처
1	<p>◆ 개인형이동수단 도시공원 통행 허용</p> <p>기존 현행법상 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 통행 제한</p> <p>개선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</p>	<p>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8.11)</p>	국토부
2	<p>◆ 삼륜차 전조등 설치거리 제한 완화</p> <p>기존 삼륜차 전조등 2개 설치시, 전조등 간 거리를 200mm 이하로 제한(이륜차 규정 적용)</p> <p>개선 삼륜차는 전조등 설치거리에 대한 이륜차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</p>	<p>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('18.7)</p>	국토부
3	<p>◆ 매입대금 분납중인 국유지 공장 증·개축 허용</p> <p>기존 국유지를 분납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기업은 분납완료 전에는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공장 증·개축 불허</p> <p>개선 매입대금 분납 중인 국유지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임대 받은 토지로 간주*하여 공장 증·개축 허용</p> <p>* 산업집적법에 따르면,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상에 공장설치 허용</p>	<p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('18.6)</p> <p>* 부처 기발표</p>	산업부
4	<p>◆ VR 사업장용 허가기준 마련</p> <p>기존 다양한 VR 사업장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등록 및 안전기준이 없어 VR 산업발전 및 사업활성화 저해</p> <p>개선 관광진흥법상의 기타유원시설업의 유기사설·기구 안전 관리 사항을 준용, 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</p>	<p>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('19.9)</p>	문체부

연번	과제명 / 개선내용	개정법령 / 개정시기	소관부처
5	<p>◆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</p> <p>기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을 기항하는 선박에 한해 크루즈승객 관광상륙을 허가</p> <p>개선 2개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크루즈 승객도 관광상륙을 허가</p>	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('18.6)	법무부
6	<p>◆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·분석에 대해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</p> <p>기존 AI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·분석 시 저작물의 복제 등이 요구되나, 동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불명확</p> <p>개선 빅데이터 수집·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</p>	저작권법 ('17.12., 발의)	문체부
7	<p>◆ 정부양곡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 허용</p> <p>기존 정부양곡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해외 수출할 경우, FTA 원산지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 시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 가중</p> <p>개선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, 이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</p>	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('18.5) * 부처 기 발표	농식품부
8	<p>◆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기준 명확화</p> <p>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농지 전용 시 기준 부재</p> <p>개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적용</p>	농지법 ('18.12)	농식품부
9	<p>◆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</p> <p>기존 임대차 계약 시 재배 기간에 상관없이 최단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규정</p> <p>개선 임대차 계약 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최단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</p>	농지법 ('18.12)	농식품부
10	<p>◆ 수입주류업자들의 수입주류 폐기방식 확대</p> <p>기존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·품질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주류 폐기 시 폐기방법을 단순 소각이나 매립방식으로 한정하여 폐기비용 부담 가중</p> <p>개선 세관장이 포장용기를 소각 또는 매물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을 통한 폐기 처리도 가능토록 개선</p>	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('18.10)	관세청
11	<p>◆ 전자통관심사 적용 요건 완화</p> <p>기존 성실무역업체에 대하여 세관관여를 최소화하는 전자통관심사를 운영 중에 있으나, 관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전자통관 심사가 영구히 불가</p> <p>개선 관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집행종료 후 2년 경과 시 전자통관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</p>	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('18.12)	관세청